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범죄·불법파견 범죄 중단하라”

노조파괴 자행 SPC 규탄,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 ... 임종린 지회장 46일 째 단식투쟁

빵 만드는 회사 SPC가 더러운 짓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악덕 저질 자본에 맞서 힘겹게 저항하는 SPC 노동자들의 손을 잡았다.

민주노총은 5월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자행하는 SPC 규탄,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강남역까지 행진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민주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중단, 노동기본권·노조 활동 보장,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5월 12일로 46일째 단식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파리바게뜨가 고용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했다” 라면서 “SPC는 4년 동안 합의를 뭉개고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있다” 라고 규탄했다.

양경수 총연맹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짓밟은 SPC자본과 어용 한국노총이야말로 윤석열이 떠드는 반지성과 반문명이



다” 라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투쟁은 민주노총 투쟁이다. 민주노총의 힘으로 함께 싸우겠다” 라고 결의했다.

최유경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임종린 지회장 단식 45일 차다. 하루 세끼 45일이면 135끼다” 라며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기사들이 새벽 일찍 출근해 거르는 아침 45끼, 화물기사 동지들이 점심시간 없이 일해서 거르는 점심 45끼를 빼면, 45끼만 걸려서 관찮다고 너스레를 떠다” 라고 전했다.

최유경 수석은 “끓고 일하는 현실, 임신 모성보호 못 받고, 가족상경조 휴가로 추모 보장 못 받고, 출안 서면 일 잘해도 진급 못 하는 현실을 바꿔보려고 시작한 조합이다” 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수석은 “노조파괴 실상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나서서 불매를

조직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를 선언하는 이유는 SPC가 망하길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하길 바라서일 것이다” 라며 “SPC는 민주노조탄압을 멈추고 시민들의 분노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으

라” 라고 촉구했다.

2017년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파리바게뜨가 5,300여 명의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다며 고발하고 지회를 만들었다. 조합원들은 치열한 투쟁으로 2018년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조건,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이 골자인 ‘사회적 합의’를 쟁취했으나 사측은 여태 지키지 않고 있다.

SPC 본사와 계열사, 가맹점들이 삼립빵, 샤니,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 패션5, 빗은, 베이커리 팩토리, 웨이크웍, 에그슬릿, 라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시티멜리, 퀸즈파크, 베라, 라플리에, 그릭슈바인, 스트릿, 다.퀸즈, 리나스, 한상차림, 파스쿠찌, 잠바주스, 커피앳웍스, 티트라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조 조직화 지원사업 늘리고, 조례로 노동법 사각지대 메워야”

작은 사업장 노동자권리 보장 지방선거 정책토론회 ... 정당·후보에 노동권 보장 공약·정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2022년 8회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권에 노조를 세우거나 가입하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5월 11일 ‘작은 사업장 노동자권리 보장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금속노조와 도심제조연대,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동조합,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함께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작은 사업장, 노조 세우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선에서 의제가 모두 사라졌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6월 1일 지방선거에 앞서 민주노총이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라면서 “노동자 요구를 지방선거 후보와 정당이 공약에 반영하도록 함께 노력하자. 오늘 참석한 진보정당들도 함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정책 발표는 광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과 박은경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맡았다.

광이경 실장은 ‘5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지방정부 과제’에 관해 발표하며, “작은 사업장일수록 임금,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다양한 지표와 조사결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광이경 실장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다”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들에 여성과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가 더 많다”라고 지적했다.

광이경 실장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임금을 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 30%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업장이었다”라며 “노동부는 이런 사업장을 제대로 근로감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법으로 규정해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1년 이내 퇴사 비율도 높았다. 광이경 실장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여성·비정규직·고령 노동자가 낮은 임금·최저임금 이하 임금·장시간·단기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며 “근로기준법 전체 노동자 적용이 우선이지만,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법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광이경 실장은 지방선거 정책과제로 ▲노동법 준수 적극 노동행정 ▲직접 관장·책임·안정 지자체 노동정책 수립 ▲노조 조직화 지원사업 확대 ▲초기업 교섭 등 노조 강화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은경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이 기업지원 정책 하



위에 놓여 있고, 노동 기본조례의 낮은 정책 영향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노동정책이 기업지원 정책 아래에 놓여 인력이나 사업 역량을 갖추지 못해 영향력이 낮다는 의미다.

김송아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단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밝히면서, ▲기업 중심 산업단지 정책, 노동 중심 정책 전환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산업단지 노동자 노조할 권리보장 ▲산업단지 양질 일자리 보장 ▲안전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만들기 등 현장노동자의 요구를 발표했다.

김송아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해 일자리 부조화를 해소하고 공간과 산업에 더 붙어 사람을 중심에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력 유치와 일자리 양성에 몰두한 고용환경 개선 사업만 했다”라고 꼬집었다.

김송아 국장은 “고용 주변 환경 개선을 넘어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안전보건법·노동법 준수, 적정 임금 보장 가능한 산업단지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